

CEO Brief

CEO Brief는 보험산업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보험회사 CEO와 유관기관의 기관장분들께만 제공되는 리포트입니다.

핀테크 기술 활용 금융포용과 활성화 방안

요약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정부의 신속한 정책대응에도 불구하고 정보비대칭에 의한 정책자금 수혜자의 쏠림현상, 자원 확대의 제약에 따른 지속가능성 여부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최근 나타난 사내대출, 급여선지급, 소상공인 선정산 등 핀테크 기술 활용 금융포용 사례들은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핀테크 회사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금융포용이 가능함을 보여줌. 따라서 금융포용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핀테크 활용 금융포용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및 절차 분야의 지원, 투자 촉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이 필요함

1. 금융포용과 핀테크 기술¹⁾

-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이란 개인이나 사업체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는 금융서비스를 지불가능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나 그것이 가능하도록 돕는 과정을 뜻함
 - 금융소외는 금융포용과 반대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 나타나는 금융소외 현상은 주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유동성 제약 형태로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신속한 정책대응은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역할을 했으나 정책자금 수혜자의 쏠림현상, 자원 확대 제약에 따른 지속가능성 여부 등이 문제로 제기됨
 - 정부정책의 신속성이나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금융포용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효율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임
-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사내대출, 급여선지급, 소상공인 선정산 사례들은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서비스 공급자의 수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금융포용의 가능성을 보여줌

1) 본고는 보험연구원과 한국FP학회가 공동 개최한 『금융혁신: 소비자편익과 소비자보호』 세미나(2024. 12. 12)의 주제발표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임. 자료는 보험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https://kiri.or.kr/seminar/dataList.do>)

CEO Brief

- 사내대출은 핀테크 회사와 고용주 간 계약을 통해 근로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대출상환금은 급여에서 직접 공제하는 서비스로서, 높은 대출 승인율, 낮은 금리, 상환 용이성 등으로 근로자의 유동성 제약 문제를 개선함
- 급여선지급은 근로자가 급여일 전 급여의 일부를 미리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근로자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직비용 절감, 생산성 증가 등의 장점이 있음
- 소상공인 선정산은 미지급된 청구서를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하고 현금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국내에서 소상공인의 카드매출을 미리 정산해 줌으로써 소상공인들의 현금흐름 확보를 돕고 있음

〈표〉 핀테크 활용 금융포용의 국내 사례

구분	서비스 내용	장단점	국내 사례
사내대출	• 핀테크 회사와 고용주 간 계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급여에서 대출상환금을 직접 공제	• (장점) 높은 대출 승인율, 낮은 금리, 상환 용이성, 근로자 생산성 개선, 이직률 감소 • (단점) 편리성에 따른 과도한 대출	샐러리파이
급여선지급	• 근로자들의 원하는 시점에 급여일 전 급여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장점) 낮은 금리, 신용등급 영향 없음, 근로자 생산성 개선, 이직률 감소 • (단점) 근로자 부담비용이 커질 위험, 과소비 조장, 급여가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	페이워치
소상공인 선정산	• 신용카드 매출과 배달주문 플랫폼을 통한 매출을 익일 입금해 주는 서비스	• (장점) 신속한 현금 확보, 담보 불필요,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도 이용 가능	얼리페이

2. 금융포용 핀테크 촉진방안

-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금융포용을 위해 제도 및 절차 분야의 지원, 투자 촉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핀테크 활용 금융포용 활성화를 도울 필요가 있음
- (제도·절차 분야의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절차적 혁신(사업개시를 위한 특례, 면허취득 요건 완화 등)을 통해 금융포용서비스 제공 핀테크 회사를 지원할 수 있음
 - 기존 제도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규제 회색지대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어 제도를 명확히 하거나 특례를 허용하여 도울 필요가 있음
- (투자 촉진) 민간부문의 금융포용 투자 기준 마련, 민간의 금융포용사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금융포용서비스 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CEO Brief

- 민간의 금융포용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출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신용평가 측면 등에서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임
 - 임팩트 투자를 위한 정책펀드 조성 시 투자목적 및 대상에 금융포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안과 임팩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검토해야 함
- 금융포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회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해 주거나, 해당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장애요인을 경감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소상공인 선지급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위탁을 가능케 하는 특례를 제공한다면 금융포용 핀테크 회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소상공인 부담 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임
 -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내대출 활성화를 위해 보증보험 심사기준의 완화 가능성 여부나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변혜원 연구위원
hw.byun@kiri.or.kr

CEO Brief

CEO Brief is a report highlighting key current issues the insurance industry faces.

Fintech-Based Financial Inclusion in Korea

ABSTRACT

Despite swift policy responses to financial exclusion, issues such as disproportionate funding allocation and sustainability concerns persist. However, recent examples of fintech-based inclusion demonstrate the potential to improve consumers'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while ensuring profitability for fintech companies. For sustainable and efficient fintech-driven financial inclusion, it is essential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fintech-based financial inclusion, promote investment, and stimulate the market.

1. Financial Inclusion and Fintech Technology¹⁾

Financial inclusion refers to a state where individuals or businesses can access financial services at affordable prices to meet their needs or the process of enabling such access. In contrast, financial exclusion –the opposite of financial inclusion– typically manifests in Korea as liquidity constraints, where individuals cannot obtain loans or have to borrow at unaffordable costs.

After COVID-19, swift policy responses for small business owners helped alleviate financial difficulties among vulnerable groups. However, concerns arose about disproportionate funding allocation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se measures due to resource constraints. Consequently, private-sector participation will be essential to ensure sustainable financial inclusion and improve efficiency.

Fintech solutions, such as employee loans, early wage access, and advance

1) This report summarizes a presentation delivered at the seminar, "Financial Innovation: Consumer Benefits and Consumer Protection" (2024. 12. 12), jointly organized by KIRI and the Korea Financial Planning Association. (<https://kiri.or.kr/seminar/dataList.do>)

CEO Brief

payments for small businesses, demonstrate the potential for sustainable financial inclusion by improving consumer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while ensuring profitability for providers.

First, Employee Loans, offered through fintech–employer contracts, provide loans to employees with repayments deducted from salaries. Their high approval rates, low interest rates, and convenient repayment processes help alleviate employees’ liquidity constraints. Second, Early Wage Access allows employees to use part of their salary before payday, improving liquidity while reducing turnover costs and boosting productivity. Lastly, Advance Payments for Small Businesses purchase unpaid invoices at a discount to provide immediate cash. In Korea, this service supports small businesses by advancing payments on credit card sales to improve cash flow.

〈Table〉 Fintech–Based Financial Inclusion in Korea

Category	Service Details	Pros and Cons	Korean Fintech
Employee Loa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viding loans to employees through agreements between fintech companies and employers with repayments deducted directly from sala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s: High loan approval rates, low interest rates, convenient repayment, improved employee productivity, reduced turnover Cons: Risk of excessive borrowing due to convenience 	Salaryfy
Early Wage Acc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Allowing employees to access a portion of their salary before payday whenever need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s: Low interest rates, no impact on credit scores, improved employee productivity, reduced turnover Cons: Risk of higher employee costs, encouragement of overspending, and excessively reduced take-home pay 	Paywatch
Advance Payments for Small Busi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positing revenue from credit card sales and delivery platforms into businesses’ accounts the next d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s: Quick access to cash, no collateral required, and availability even for those with low credit scores 	EarlyPay

CEO Brief

2. Promotion Strategies for Fintech-Based Financial Inclusion

For sustainable and efficient fintech-driven financial inclusion, it is essential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fintech-based financial inclusion, promote investment, and stimulate the market.

First, procedural innovations under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such as special exemptions for business launches and relaxed licensing requirements, can support fintech companies providing financial inclusion services. Unclear regulations in gray areas may hinder the launch of new services. Therefore, clarifying regulations or granting exemptions can facilitate innovation.

Second, promoting private-sector investment in financial inclusion services by establishing clear investment standards and offering targeted incentives, such as tax credits on capital contributions and improved credit evaluations, will be important. Furthermore, government-driven social impact funds should explicitly include financial inclusion as a core investment objective to encourage broader participation in this area.

Third, we could consider measures to reduce financing costs for fintech companies providing financial inclusion services or to lower barriers to service adoption. For instance, allowing credit card receivables to be entrusted to advance payment service providers could lower funding costs for the service providers and reduce fees for small businesses. Additionally, promoting employee loans for SME employees may require easing guarantee insurance underwriting criteria and implementing necessary adjustments to facilitate this.

HaeWon Byun, Research Fellow
hw.byun@kiri.or.kr

◆ 김소연 교수(서울대학교)

- 디지털 금융이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소비자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소비자의 디지털 금융역량 제고가 필요함
 - 핀테크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기획 단계의 초기 자본 지원에서 확대되어 각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세부적으로 해준다면 정책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자율 규제 중심의 디지털 금융 규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
 - 금융취약계층 내에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다양한 소비자 집단(고령층, 청소년층)이 존재하므로 세분화하여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접근이 필요함

◆ 김재영 법제연구팀장(한국소비자원)

- 디지털 금융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디지털 금융의 성장과 소비자의 금융역량 간에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디지털 금융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민간 기관, 공적 기관 모두 디지털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식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활용법 습득을 위해 정보 제공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금융 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저소득층·저학력층의 디지털 금융 이해력이 낮게 나타나며, 20대는 금융 이해력은 낮지만 디지털 이해력은 높은 특징을 보임
 - 디지털 금융을 이용할 때 모든 소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면 소비자의 디지털 금융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며, 현재는 소비자 특성별 맞춤형 정보 제공이 어려울 수 있으나 시의 도입은 이를 가능케 할 것으로 생각됨
- 디지털 금융이 활성화될수록 관련 범죄 또한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김정은 대표(스몰티켓)

- 현재 인수어테크는 국내 규제, 시장환경 등으로 인해 제공 서비스의 품질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도 낮아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 스몰티켓은 최초로 배달 라이더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보증을 시작했고 소액 다건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손해율도 양호함

- 그러나 이와 같은 혁신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륜차 공제조합에서 동일한 보험 상품을 출시하는 등 상품의 차별화가 진입 장벽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진정한 자유경쟁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많이 생겨나고 성장하여 산업 전체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램

◆ 김태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디지털 금융이 활성화될 때 거래의 안정성과 편의성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균형점을 도출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디지털 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편의성을 높이는 측면으로만 접근하여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함
 - 편의성을 크게 높인 시스템을 도입한 업체들의 경우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잠재 위험을 충분히 점검하고 배상재원 등 관련 대비도 필요함
 - 예를 들어, 현재 기술의 발달로 문제가 해결되었으나 신분증 촬영을 통해 비대면 본인 인증을 하는 경우, 시스템상 신분증의 사본 촬영인지 원본 촬영인지 식별할 수 없어 금융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소송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음
 - 금융 보안 사고나 손해 배상 재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많이 개발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근로자 대출의 경우 핀테크 회사가 금융회사에 비해 조달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대안으로는 대안적 신용평가 모형 개발이나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중금리 대출 유도 등을 들 수 있음
 -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전문은행 3개사(카카오, 케이뱅크, 토스)에 중금리 대출을 허용했는데 이들 간의 경쟁을 통해 서민금융을 유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가상자산 규제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투자 및 활용 가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올해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을 담고 있음
 -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사의 역할과 거래소의 역할을 동시에 하므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변혜원 연구위원

hw.byun@kiri.or.kr